

[서식 예] 준비서면(양수금, 원고)

## 준비서면

사 건 20○○가합○○○○ 양수금

원 고 ○○○

피 고 ◇◇◇

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.

다 음

### 피고 제출의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

#### 가. 채권의 이중양도사실 여부

이 사건 원고와 소외 채무자 김◆◆ 사이에 채권양도전인 20○○. ○. ○. 소외 채무자 김◆◆는 또 다른 채권자 소외 이◆◆에게 채권양도계약을 작성해준 사실이 있어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사실은 피고의 주장과 같습니다. 그러나 그 외 피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전부 부인합니다.

#### 나. 채권양수인간의 우선권

소외 채무자 김◆◆는 소외 이◆◆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무의 변제기가 경과된 뒤 지급기일의 연장을 신청하면서 소외 채무자 김◆◆가 피고에게 가지고 있던 대여금반환채권을 담보조로 당사자간 채권양도계약을 작성하고, 차용증을 소외 이◆◆에게 건네 주었으나, 당시 소외 채무자 김◆◆는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직접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지 않았으며, 피고 또한 위 소외인들 사이의 채권양도사실을 이 사건 양수금청구의 소송 진행 중에 알게 된 것으로 사전에 승낙한 사실도 없다 할 것이고, 가사 채권양도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이 없는 반면, 소외 채무자 김◆◆는 피고에게 20○○. ○. ○.자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450조에 의하면 원고가

우선권 있는 채권양수인이라 할 것이므로, 피고가 단순히 채권이 이중 양도되었고, 차용증을 타인이 보관하고 있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거부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.

다. 원고가 채권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채권양도의 통지

피고는 답변서에서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인 원고가 하였으므로 적법한 통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, 채권양도의 통지는 법률행위가 아닌 관념의 통지이므로 대리인이 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고 이는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.(대법원 1994. 12. 27. 선고 94다19242 판결 참조) 더욱이 양도인인 소외 채무자 김◆◆가 채권양도 후 해외로 출국하면서 위임장을 작성해주었으며, 이에 근거하여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.

라.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의 이중양도사실 및 채권양도통지의 하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.

20○○. ○. ○.

위 원고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제 출 법 원	본안소송 계속법원	제 출 기 간	제소 후 변론종결 전까지
제 출 부 수	준비서면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분 제출	제 출 의 무	지방법원 합의부와 그 이상의 상급법원에서는 반드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변론을 준비하여야 함(민사소송법 제272조 제2항).
의 의	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.		
기 재 사 항	<p>&lt;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에 법정되어 있음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당사자의 성명·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</li> <li>2.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</li> <li>3. 사건의 표시</li> <li>4. 공격 또는 방어에 방법</li> <li>5.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에 방법에 대한 진술</li> <li>6. 덧붙인 서류의 표시</li> <li>7. 작성한 날짜</li> <li>8. 법원의 표시</li> </ol>		
효 과	자백간주이익(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), 진술의제의 이익(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), 실권효의 배제(민사소송법 제285조 제3항), 소의 취하 동의권(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)		
기 타	<p>·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, 법률행위의 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 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, 또한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고, 달리 이를 금지할 근거도 없음(대법원 1994. 12. 27. 선고 94다19242 판결).</p>		